

연구논문

방재산업 활성화정책에 관한 연구

하 규 만

이 논문의 목적은 정부차원에서 침체한 방재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조사하는 것이다. 이론적 기준으로서 정부는 초창기 단계의 방재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더욱 주도적인 전략을 감행해야 하며, 방재업체도 그러한 전략의 대상물이 아닌 보다 철저한 이용자로서 역할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소방방재청과 산자부는 방재 산업정책을 전담하는 내부조직이 없는 상태에서 행정적, 법률적, 재정적 지원을 시도하고 있다. 방재업체는 거의가 중소기업체로서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매우 부실한 형편이다. 방재기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004년 6월 현재 약 70% 이상의 방재업체들은 경영사정이 어렵거나 매우 어렵다고 응답하였으며 동시에 정부보조를 매우 필요로 하고 있었다. 특히 업체의 약 60%는 행정적 보조나 법률적 보조가 아닌 재정적 보조를 가장 원하고 있었다. 방재공무원과 일반소비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논문의 초점은 방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서 ① 행정적 차원에서는 소방방재청과 산자부는 방재산업을 위한 정책가능을 확대시키면서 방제품의 판로개척과 대중매체를 통한 상품홍보와 교육을 확대하며, ② 법적 차원에서는 방제품 제조에 관한 국제규정을 세계시장에 선도적으로 제시할 뿐만 아니라 국내적용으로 수출증가를 지원하며, ③ 재정적 차원에서는 WTO 규정을 위배함이 없이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 활용을 통하여 일정한 지역에서 방재업체의 집적지를 만드는 것이다.

주제어 : 방재산업, 활성화정책, 소방방재청, 산업자원부

하규만

미국 University of Nebraska-Lincoln 정치학과에서 정책학 박사 학위를 받고 현재 가톨릭대 강사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과학기술정책, 정보통신수출정책, 위험관리 등이다.

kyoocha@hanmail.net

1. 서론

대한민국 국회의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하여 일부 이익집단의 지원과 다수 국민의 지탄을 동시에 받으면서 2004년 중반에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 산하에 소방방재청이 공식적으로 출범을 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의 방재산업은 시장경제에서 일정한 위치를 차지하기 시작하였으

나 경제침체와 더불어 여전히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다. 특히 부족한 정부지원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재산업은 재난예방이라는 차원에서 관련인들의 우려를 자아내게끔 하고 있다. 이러한 방재산업이 처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이 논문 연구문제의 시발점으로 볼 수 있다.

정부의 특별한 정책적 지원이 없이 방재산업이 현재 상태와 같이 계속 방치된다면 더욱 많은 기업체들이 도산에 직면할 것이고 국가방재 차원에서도 크나큰 손실을 볼 것이다. 왜냐하면 활성화된 방재산업체들이 존재하지 않고, 그래서 공공기관만으로 방재를 성취하기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면에서 이러한 방재산업의 도산은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 논문의 목적은 산업역사 관점에서 태동기를 거쳤지만 여전히 다양한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방재산업을 정책적 차원에서 보다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2. 이론적 배경

방재는 재난을 막는다는 의미이다. 방재에는 자연재난을 막는 것은 물론이고 인위재난을 막는 것도 중요한 분야로 포함된다. 우리나라의 방재는 역사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포함한 정부기관에 의하여 주로 수행되어 왔다(노춘희·송철호, 1998: 3~5). 즉, 방재는 군사나 외교와 같이 공공기관만이 다룰 수 있는 순수공공재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정부기관에 의하여 방재활동을 하는 것은 여전히 근본적 한계점이 있었다. 왜냐하면 정부기관의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은 여전히 한계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재난이란 장소와 시간에 아무런 관계가 없이 발생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방재는 공공기관과 민간부문을 포함한 국가의 총체적 노력 없이는 근본적 목적달성이 어렵다.

방재산업이란 재난을 막는 데 요구되는 상품을 만드는 산업을 말한

다. 그래서 방재산업의 범위가 매우 거대할 수도 있다. 이 논문에서의 방재산업이란 주로 자연재난을 막는 데 필요한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을 말한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방재산업은 화재를 포함한 인위 재난을 막는 산업이 포함되는 광역적 의미로도 사용되고 있다.

최근에도 공공기관이 목적달성을 위하여 방재산업체를 어느 정도로 활용하고 있는가는 매우 회의적인 대목이다. 물론, 공공기관은 이제 막 시장에서 기본적 구도를 형성하려는 방재업체들을 위하여 일년에 몇 번씩 전시회를 열어주는 등 방재적 관심을 유도하려고 한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방재업체를 재난의 예방, 대응, 복구의 모든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이용하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그래서 이러한 방재산업의 활성화는 우리가 당면한 새로운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방재산업이 지금까지 크게 활성화되지 못한 데는 여러 가지의 이유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이 갖는 방재 불감증이다. 수요자들이 방재의 필요성에 관하여 절실하게 깨달아야만 방재산업의 수요가 발생할 것이다. 또 다른 이유로서는 산업정책에서 성장제일주의만을 주로 지지하였다는 것이다. 형평성에 근거하여 방재에 관한 관심을 산업적으로 유도했어야 했는데, 효율성만을 고집하여 이익창출이 단기적으로 가능한 산업만을 집중적으로 육성한 성장제일주의가 방재산업의 활성화를 막아왔다(김시윤·김정렬·김성훈, 2000: 430~437).

초창기 단계인 방재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부는 순수한 시장기능에만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중론이다. 학자와 논점에 따라서 시장기능의 중요성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그러나 정부의 주도권에 의존하면서 시장기능을 보다 활성화시키는 것이 다수의 국가 특히 아시아 국가들의 전략이다. 시장기능에 기초하면서 정부는 주도적으로 방재기업체의 활동을 촉진시키는 전략을 혼합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Lam, 2000: 397~4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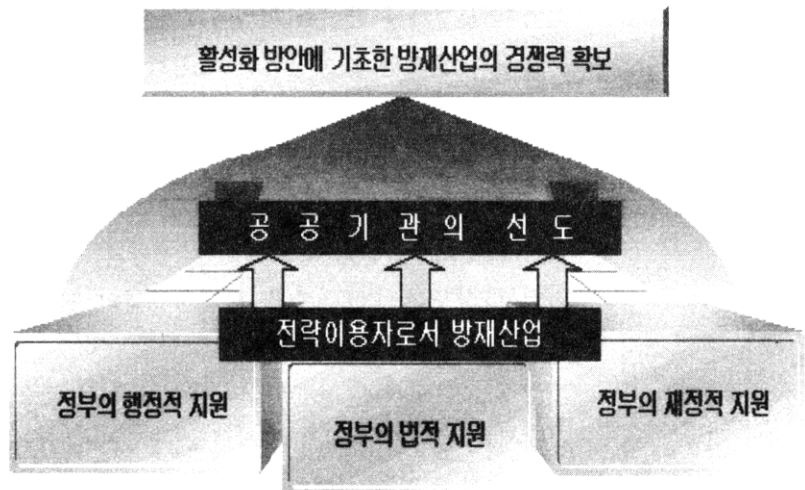
상징정치(*symbolic politics*)의 개념은 많은 뜻을 포함하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정부가 상징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이미 외부로 알려진 정책적 수단을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상징정치의 측면에서, 정부

는 방재산업체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전략을 구사할 필요도 있다. 왜냐하면 정부는 다른 어느 기관도 선불리 시도하려고 하지 않는 초보적 수준의 방재산업 활성화를 시도함으로써 상징정치의 효과를 국민을 포함한 관련인들에게 홍보하고 방재를 더욱 실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상징정치를 통하여 기업체는 상반된 역할로 자체활동을 할 수 있다. 하나는 기업체가 상징정치의 대상물로서 활동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상징정치의 이용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Matten, 2003: 216~224). 어느 것이 좋은 역할인지는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기업체가 정부정책에 관하여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보이는 상징정치의 이용자로서의 역할이 보다 필요하다. 정부와의 원활한 대화에 기초한 기업체의 성숙한 대응이 보다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만약에 방재산업정책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방재에 관련된 정부의 역할을 보다 진지하게 연구한다면 방재업체들도 보다 효과적으로 방재상품을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을 것이다(Birkland & Nath, 2000:

그림 1
정부의 역할에 기초한
논문의 구성도



275~278). 즉, 학자들이 방재를 위하여 산업체의 적극적 협력과 함께 정부가 실행하는 행정적, 법적, 재정적 지원을 포함한 구도를 보다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에서도 방재의 궁극적 목적달성이 한층 용이해질 것이다.

방재산업 활성화정책을 가장 효과적으로 묘사하고 관련된 개선점을 도출하기 위해서 <그림 1>이 보여주는 것과 같이 첫째, 방재산업정책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을 분석단위로 설정하였다. 둘째, 분석단위는 우리나라에서 방재산업이 어떠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셋째, 분석단위는 바로 전술한 두 단위에 기초하여 밝혀질 정책적 암시점(policy implications 혹은 활성화 방안)을 조사하는 것이다. 전술한 세 개의 분석단위에서 면밀히 조사되어야 할 요소들은 산업정책학에서 중요하게 간주되는 행정적, 법적, 재정적 지원이다. 이러한 요소들은 정부차원에서 방재산업을 토론할 수 있는 필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3. 공공기관의 업무

방재산업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은 다수가 있다. 여기에서는 그 중에서도 비중이 큰 소방방재청과 산업자원부를(이하 산자부) 중심으로 소개하겠다. 재난에 관하여 종합적 정부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2004년 6월 1일에 행자부 산하기관으로 소방방재청이 신설되었다. 이때부터 재난업무체제의 일원화를 위한 시도가 개시되었다. 소방방재청은 목적달성을 위하여 청장 아래에 기획관리관, 예방기획국, 대응관리국, 복구지원국을 포함한 1관 3국을 두고 있다.

소방방재청에서 방재산업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내부조직은 다수가 있다(소방방재청, 2004). 예를 들어서, 예방기획국의 특수재난관리과는 재난위험업종을 선정하고, 관리하며, 동시에 관련된 안전기준을 표준화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대응관리국의 구조구급과는

긴급구조와 관련된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한다. 대웅관리국의 시설장비과는 다양한 방재산업 중에서도 소방산업을 육성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복구지원국의 기술지원과는 안전과 관련된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한다.

전술된 소방방재청의 기관과 업무를 종합하여 보면 우선적으로 소방방재청에는 방재산업을 관할하는 유일한 내부조직은 존재하지 않는다. 전술된 다수의 내부기관들은 재난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방재산업과 관련된 업무도 그 중의 하나로 수행하고 있다. 즉, 다수의 기관들이 자신의 고유한 영역과 관련된 방재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산자부는 1948년도에 우리나라 정부가 수립될 때부터 시작하여 모든 산업을 관리하는 부처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970년대의 석유위기와 1998년도의 금융위기 때에는 산자부의 기능에 일부 변화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많은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산자부의 조직도를 면밀히 분석하여 보면, 크게는 3실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기획관리실, 무역투자실, 자원정책실로 구성되어 있다. 방재산업은 주로 자원정책실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자원정책심의관, 에너지산업심의관, 원전사업지원단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조직들에는 다수의 과가 설치되어 있으며, 특정한 산업과 기능에 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자원정책실 이외에도 산업정책국, 산업기술국, 자본재산업국, 생활산업국이 방재와 관련된 업무를 부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산업자원부, 2004).

지금까지 설명한 산자부 조직의 기능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산자부에는 방재산업을 총괄적으로 관할하는 부서가 존재하지 않는다. 각 내부기관은 자신의 업무영역에서 방재산업과 관련된 업무를 별도로 수행하고 있다. 즉, 다수의 부서들이 자기의 조직목적에 따라서 방재산업을 포함한 모든 산업의 일정한 부분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소방방재청과 산자부의 방재산업 담당기관과 업무를 종합하여 보면 두 기관 모두에는 방재산업을 전담하는 기관이 존재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소방방재청이나 산자부 모두가 방재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큰 비중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일면에서는 방재산업에 대한 업무가 상당히 산만하게 수행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한 업무들 중에서 정부는 행정적 차원에서 행정지도, 행정절차 간편화 등을 통하여 산업체를 지원하여 왔다(홍기남, 2004: 12~13). 그러나 전반적 측면에서 정부의 행정적 지원은 그렇게 탁월하게 평가 받는 분야는 아니다. 특히, 최근에 방재업체들은 상품을 생산하고서도 판로개척에 어려움이 많아 상품판매에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 비슷한 문맥에서 방재업체들은 상품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방재상품 판매가 난항을 겪고 있다. 즉, 방재산업을 위한 방재행정력이 여전히 집중되지 못하고 있다.

법률적 차원에서 2004년 3월 11일에 행정부가 제안하고 국회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통과시켰다. 법률 제 07188호인 이 기본법 제 72조 1항에 따르면 정부는 방재산업의 발전과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제 72조 2항에 따르면 소방방재청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따라서 중소기업의 방재기술 및 사업화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국회, 2004). 요약하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통하여 정부는 방재산업을 국내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 그러나 동 법은 방재산업의 수출육성에 관한 규정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재정적 측면에서 정부는 민간기업을 돕기 위하여 보조금, 세금혜택, 기타 금융적 수단을 사용하여 왔다. 그러나 5절 3)에서 후술하겠지만 방재산업은 다른 산업분야들에 비교하여 이러한 금융적 혜택을 결코 많이 받은 편에 분류되지 않는다. 즉, 정부에서는 발등에 떨어진 시급한 사태를 해결할 목적으로 재정을 편성한 관례로 방재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소홀하였다. 또 다른 의미에서는 방재산업이 정

부가 재정적 지원을 감행할 만한 매력을 지니지 못한 분야에 속하여 왔다고도 할 수 있다. 대신에 국가경제의 성장에 중심이 되는 산업들이 정부로부터 많은 재정적 지원을 받아왔다. 빈곤한 재정지원으로 방재산업체는 여전히 영세성이 지속되고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

4. 방재산업 현황

국내시장에 진출해 있는 방재상품의 숫자와 종류는 과거에 비교하여 많이 증가했다. 특히 2003년에 발생한 대구지하철 참사사고와 태풍 매미의 영향으로 방재상품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은 그래도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2005년 5월 말 대구에서 열린 “2005 대한민국 소방방재·안전엑스포”를 자세히 살펴보면 소방방재와 안전에 관련된 신기술과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되었다. 또한 15개국에서 250개의 기업체가 방재상품을 전시하였으며, 약 10만 명이 관람객으로 참석하였다(소방방재청·대구광역시, 2005).

우리나라의 방재산업체를 규모별로 조사하여 보면 거의가 중소기업체에 해당된다. 물론 대기업체에서도 국가안전관리시스템과 같은 거대한 프로젝트에 개입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그러한 소수의 경우를 제외하면 방재산업에 관련된 기업체들은 인적 자원이나 자금 면에서 소규모로 운영이 되는 벤처기업 혹은 중소기업의 성격을 띤 경우가 거의 대다수이다.

우선, A사에서 만든 개인용 방연마스크는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안면부에 착용하면 호흡기가 공기를 걸러주고 마스크는 열로부터 사람의 피부를 보호해 준다(노디스사, 2004). 일반적으로 알려진 공기호흡기는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관들이 입에다 호스를 물고 공기통을 등에 지고 진화작업하는 도구이다. 가격도 2~3백만 원 이상을 호가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구입하여 화재발생시에 착용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도구이다. 반대로 A사의 제품은 가격도 매우 저렴하기 때

문에 일반인들이 쉽게 개인용으로 구입할 수 있다. 만약 대구지하철 참사 당시에 승객들이 이 방연마스크를 지니고 있었다면 사상자의 숫자는 확연히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B사는 휴대용 소화기를 생산하고 있다. 이것은 아주 소형이지만 탄산소화기보다 3배나 뛰어난 소화능력을 가지고 있고, 분말이나 포말소화기보다는 2배 이상 뛰어난 소화능력을 가지고 있다. 수명이 반 영구적이고 진화 후 약재로 인한 피해가 거의 없는 제품이다(케스타사, 2004).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소화기는 분말식으로 일정한 무게를 가진 소화기이다. 그러나 B사 제품은 안전핀이 없는 에어졸 식으로서 누구나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이 제품은 일본 TV 홈쇼핑에도 진출하여 수출진흥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방재도구합도 최근에 많이 출시되고 있다. 방재도구합이란 상품주문자의 요구에 따라서 A사, B사 등의 소규모 제품을 포함한 다양한 방재품을 세트로 만들어서 주문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방재합 제작사는 주로 상품을 직접 생산하는 업체이기보다는 계약을 통하여 우수하고 필요한 상품만을 선정하는 역할을 한다. 2004년 초 반기만 하더라도 방재도구합을 판매품목으로 선정하는 업체는 극소수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중반기에 접어들면서 다수의 업체들이 도구합이라는 아이디어를 이용하여 방재도구합을 만들어서 시판하고 있다.

C사는 아쿠아 블럭이라는 제품을 만들고 있다. 홍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범람하는 물을 막기 위하여 자루에다 모래를 담아서 물길을 막는다. 그러나 이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짧은 시간 안에 모래자루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C사는 고흡수성 폴리머의 흡수제를 내장하고 천연마 섬유의 외장포대를 이용하여 아쿠아 블럭을 만들었다. 암시하였듯이 기존의 제품과는 다르게 모래나 흙이 필요 없으며 홍수가 발생할 때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한신터보텍사, 2004).

D사에서는 소형소방차를 생산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소방차가 제시간에 출동하였다고 하더라도 열악한

도로와 주차사정 때문에 화재현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화재피해를 지켜봐야만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D사는 작은 규모로 소방차를 만들어서 전국에 보급하고 있다. 또한 이 소형 소방차는 조작이 매우 쉬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진화이엔씨사, 2004).

전술한 기업체들이 훌륭한 방재상품을 생산하는 것은 인정되지만 모든 방재상품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 방재상품의 제조과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모 기업체의 경우에 실제상황에서 방독면에 가스가 유입되는 경우도 발생하였고, 방연마스크가 불에 녹아버리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또한 일부 상품은 제품의 질은 우수하지만 상품의 포장이 매우 조잡하여 소비자의 구매를 끌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방재산업체들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빠른 시간 내에 시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 다른 각도에서 전술한 방재상품들이 보완해야 할 점도 다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A사가 생산한 방연마스크를 일반인들이 필수품으로 소지하기 위해서는 관련업체는 정부의 지원을 도출하여 B사의 소화기 등과 함께 열차의 방재함이나 기타 선물함에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D사가 생산하는 소형 소방차도 매우 효과적이지만 다른 보완책으로서 업체들은 옥외에 소화전을 증설하는 방안을 정부와 지역사회에 타진해 볼 필요도 있다.

전술한 방재업체들은 고유한 방재품을 개발하기 위하여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연구소를 설치하고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다. 우리나라 산업의 전체적 측면에서는 1970년대 말부터 기업연구소가 생겨나기 시작하였으며, 2004년 7월 현재에는 거의 1만 개 정도가 있다(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004). 방재업체의 기업연구소는 거의가 2000년대를 전후하여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현실적으로 방재기업체에 부속된 기업연구소의 활동은 여전히 미비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기업연구소에 근무하는 박사급 연구원들도 상당히 부족한 실태이다(송재복, 2003: 458~459).

전술한 방재업체들은 현재의 침체된 경제상황과 더불어 매우 어려운 경영환경에 처해있다. 방재업체들의 현재 상황을 보여줄 만한 정 부자료가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 논문은 자체 설문조사를 시도하 였다. 이메일이나 전화 등을 이용한 설문조사를 할 수도 있었지만 경 험적으로 이러한 방법들에 대한 응답률은 매우 낮기 때문에 방재업체 들을 직접 방문하여 얼굴을 대면하면서 <표 1>과 같은 설문조사를 실 시하였다. 즉, 이 논문은 국립방재연구소가 2004년 6월 8일 세종문화 회관에서 개최한 방재전시회에 참가한 22개 업체를 대상으로 전수조 사를 실시하였다.

표 1 방재산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 질문 번호 | 질문 | 응답 | 응답 기업체수 (응답률) | 비교자료* | |
|-------|---|-------------|---------------|---------------|---------------|
| | | | | 응답 공무원수 (응답률) | 응답 소비자수 (응답률) |
| 1 | 지난 6여개월 동안 (2004. 1. 1. ~2004. 6. 현재) 귀사의 (혹은 일반적 방재산업체) 사업은 어떠한 편이 었습니까? | ① 잘 되었다 | 2/22 (9%) | 0/22 (0%) | 0/22 (0%) |
| | | ② 보통이었다 | 4/22 (18%) | 0/22 (0%) | 0/22 (0%) |
| | | ③ 어려웠다 | 9/22 (41%) | 10/22 (45%) | 13/22 (59%) |
| | | ④ 매우 어려웠다 | 7/22 (32%) | 12/22 (55%) | 9/22 (41%) |
| 2 | 귀사의 (혹은 일반적 방재산업체) 경영을 위하여 정부보조가 어느 정도로 필요하 십니까? | ① 매우 필요하다 | 16/22 (73%) | 4/22 (18%) | 2/22 (9%) |
| | | ② 보통으로 필요하다 | 4/22 (18%) | 12/22 (55%) | 14/22 (64%) |
| | | ③ 불필요하다 | 2/22 (9%) | 6/22 (27%) | 6/22 (27%) |
| 3 | 만약 정부보조가 필 요하다면, 어떤 형태 의 정부보조가 필요 하십니까? | ① 행정적 보조 | 4/22 (18%) | 8/22 (36%) | 6/22 (27%) |
| | | ② 법률적 보조 | 5/22 (23%) | 6/22 (27%) | 7/22 (32%) |
| | | ③ 재정적 보조 | 13/22 (59%) | 8/22 (36%) | 9/22 (4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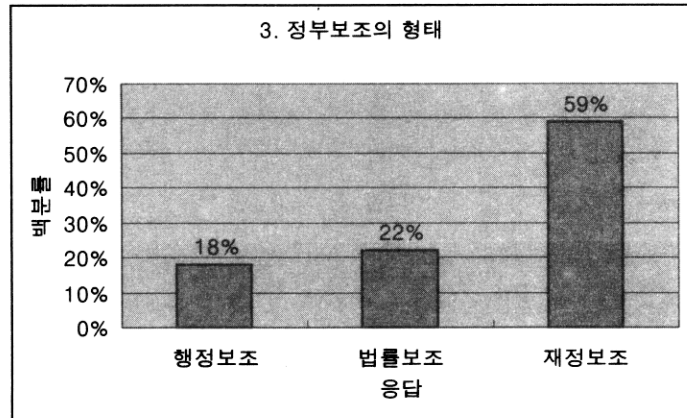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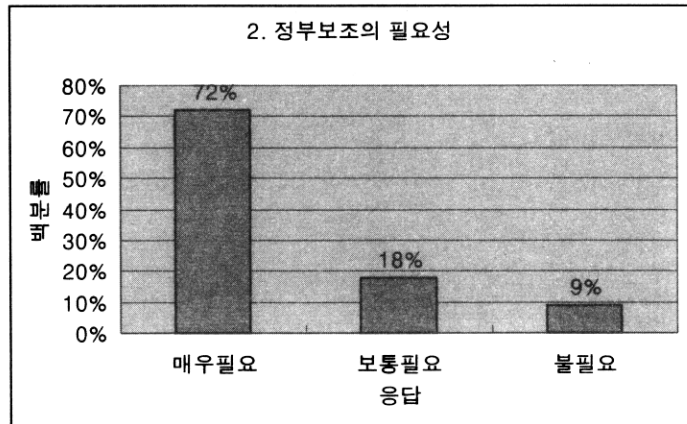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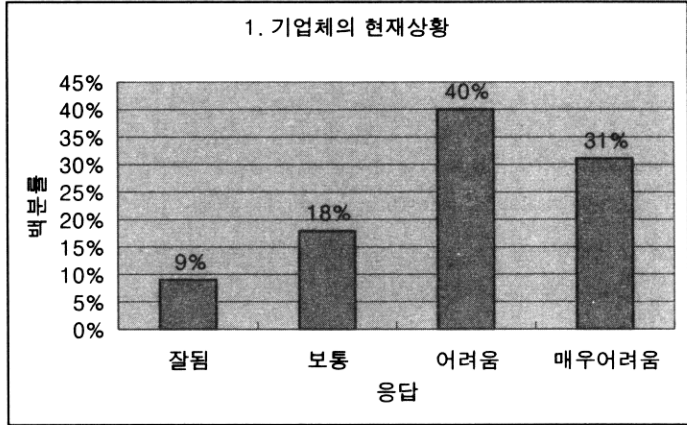
조사대상 업체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하였다. 첫 번째 질문은 해당 기업의 현재 상황에 관한 것으로서 최근 해당사의 방재사업이 어떠한 편인가를 물었다. 두 번째 질문은 정부보조의 필요성 유무에 관한 것으로서, 해당사의 경영을 위하여 정부의 도움이 어느 정도로 필요한가를 물었다. 세 번째 질문은 정부보조의 형태파악에 관한 것으로서 해당사가 어떠한 형태의 정부보조가 가장 필요한가를 물었다. 모든 참가업체로부터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질문에 대한 응답률은 100%였다.

<그림 2>는 <표 1>의 응답 기업체수를 더욱 확실하게 보이기 위하여 응답률을 막대그래프로 처리한 것이다. <그림 2>의 설문조사 응답률의 그래프를 요약하면 조사대상자 중 거의 73%의(어려움 41%+매우 어려움 32%) 기업이 회사사정이 어렵거나 매우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회사들은 주로 내수시장에 주력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고 회사경영이 잘된다고 응답을 한 기업체는(2/22개 사, 9%) 주로 외국수출에 주력하는 회사로 파악되었다. 동시에 73%의 회사들은 정보부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행정적 보조나(18%) 법률적 보조보다도(23%) 재정적 보조를(59%) 더욱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의 비교자료는(*) 주 설문조사와 비슷한 시기에 문맥조정을 거쳐서 방재관련 공무원 22명과 소비자 22명을 포함한 전체 4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이다. 조사대상 공무원의 100%가 방재산업체의 최근 사정이 어렵거나 매우 어렵다고 대답하였다. 대다수인 55%의 공무원은 방재산업체의 경영을 위해서 정부보조가 보통 수준으로라도 필요하다고 하였고, 정부보조 세 가지에 관하여 행정적 보조와 재정적 보조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조사대상 일반소비자들의 100%가 방재산업체의 사정이 어렵거나 매우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73%의 일반소비자들은 방재산업체를 위한 정부보조에 관하여 보통 수준 혹은 매우 필요하다고 대답하였고, 정부보조의 형태로서 재정적 보조의 필요성을 가장 많이 지

그림 2
방재산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응답률 그래프



지하였다. 요약하면, 방재산업체를 바라보는 공무원과 일반소비자의 시각은 기업인들과 마찬가지로 방재산업체의 최근 사정이 결코 순탄치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였으며, 정부보조의 필요성과 형태에 관해서도 거의 동일한 의견을 표출하였다고 판단된다.

5. 방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

중소기업체의 경영자들이 공무원에게 느끼는 감정은 여전히 친근하지 못하다는 것이 맞을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 공무원들은 중소기업인들을 돈만 벌려는 장사꾼으로만 오해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체는 서로의 역할에 대한 상호이해와 진정한 협조가 필요하다. 공공기관이 민간방재산업을 활성화하려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여기에서는 행정적 지원, 법적 지원, 재정적 지원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겠다.

1) 행정적 지원

행정적 차원에서 공공기관이 방재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우선조건은 공공기관에 방재산업을 전담하는 내부기관이 설치되는 것이 이상적이다. 하지만 정부정책에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마다 전담기관을 신설한다면 어처구니없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즉, 전담기관의 설치는 다른 많은 인적, 재정적, 기타 조직적인 파생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을 찾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소방방재청과 산자부가 방재산업에 관련된 업무를 내부의 다수 기관에서 체계성이 없이 수행하여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은 바로 방재산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기능을 지금보다는 더욱 확대시키는 것이다. 새로운 기관의 설립이 아닌 관련기관의 기능을 확대시키는 대안은 공공기관이 행정적 차원에서

전문적 기관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도 있다.

행정적 차원에서 공공기관이 방재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또 다른 경로의 하나는 방재품 판로개척이다. 근래에 방재업체는 경비절약의 목적으로 고유한 판매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경비가 많이 드는 텔레비전에 방재상품의 광고가 거의 없는 것이 이것을 증명한다. 대신에 각 업체에 소속된 홍보팀은 자사의 상품이 필요한 곳을 직접 방문하여 판매광고를 하고 있다. 특히, 민간기관을 주요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방재와 관련이 많은 지하철공사, 전력공사, 소방서 등을 포함한 공공기관을 방문하여 상품의 광고를 서두르고 있다. 또한 국가에서 주관하는 상품전시회에 출품하여 상품의 광고를 시도하기도 한다.

그러나 중소기업체들이 우수한 방재품을 생산하고는 있지만 상품을 판매하는 루트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표 1>과 <그림 2>에서 나타난 조사결과가 이것을 증명한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훌륭한 품질과 포장을 갖춘 상품들이 판매될 수 있도록 행정적 차원에서 판로개척에 많은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 한 예로, 현재 매우 심각한 젊은 20~30대의 실업률을 이용하는 경우이다. 방재품의 판로개척에 실업인력을 이용하면 실업률도 줄어서 좋고 방재품의 판로도 개선될 여지가 많다. 방재품에 대한 인식제고를 기초로 하여 정부는 젊은 노동자들이 방재품의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방재상품의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의 행사 선물과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 즉,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은 매년 일정한 기간에 해당조직의 설립일이나 노동절, 기타 행사를 기념하기 위하여 선물세트를 만들어서 직원들에게 배포하는 행사를 한다. 이러한 때에 소모품이나 사치품을 선물세트로 지정하기보다는 방재상품을 선물세트로 준비하여 직원들에게 배포한다면 일석 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 우선은 방재품의 소비가 촉진되어 판로개척이 보다 수월해지며, 직원들은 미래투자의 하나로서 자신의 주위에 방재상품을 비축하는 효과를 가질 것이다.

방재산업의 활성화가 아무리 과학적으로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관련된 정부, 업체, 국민이 구매를 않는다면 정책적 성공을 거두기는 매우 어렵다(Renn, 1990: 3~7; Wildavsky & Dake, 1990: 56~60). 이러한 경우에 정부는 행정적 차원에서 대중매체를 적절히 이용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 특히, 언론과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방재산업의 필요성을 언론을 통하여 일반인들에게 강조할 필요가 있다.

외국의 일정한 사례들은 언론의 중요성을 다시금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서 1979년에 발생한 미국의 Three Mile Island 핵발전소 사고와 1986년에 소련의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에서 언론의 관련사고에 대한 정보확산이 없어서 사고수습이 지연된 적이 있었다(안형기, 2000: 120~121). 우리나라의 방재산업의 활성화가 정부의 지원으로 인터넷, 텔레비전, 라디오, 기타 언론매체를 통하여 대중들에게 알려진다면 방재제품의 수요가 촉진될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대중매체는 다양한 각도에서 보도를 해야만 한다. 일반인들이 재난에 관해서 정보를 얻는 수단은 바로 이러한 대중매체에 의존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대중매체에서 방재산업을 언급하지 않는다면 일반인들은 방재산업의 존재를 모를 가능성도 높다. 방재산업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보도는 방재차원에서 매우 필요한 것이다(정연구·박원훈, 1998: 13~21).

신방송법에 따라서 KBS가 재난방송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한국언론재단·한국기자협회, 2003: 20), 대중매체의 방재산업체와 방재제품에 대한 홍보는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대중매체는 재난을 보도하고 그 원인을 찾는 데 주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재난의 문제점을 예견해서 사회적으로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필요하다(엘른노 싱거·필리스 엠 앤드레니, 2003: xi~xii). 즉, 정부는 대중매체와 협력하여 방재업체와 방재제품의 홍보를 통하여 국민들에게 재난과 방재에 대한 긴장감을 더욱 조성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대중매체를 이용할 때 또 하나의 중요한 사항은 바로 국민을 상대로 방재산업을 포함한 방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물론, 학교나 기타 기관을 통하여 방재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방송을 통한 방재교육은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교육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폭넓은 효과를 지닌다. 이러한 방재방송은 방재상품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방재산업 활성화에 긍정적 작용을 할 것이다.

2) 법적 지원

법적 지원으로서 공공기관은 국회와의 긴밀한 협조하에서 방재업체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이들을 지원하는 법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Flynn, Kasperson, Kunreuther, & Slovic, 1997: 9~13). 방재산업은 국가의 기간을 보호하는 산업임을 강조하여 이러한 산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체들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한 예로서,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회사가 새로운 건물을 지을 때는 화재, 태풍, 홍수 등의 재난발생에 대비하여 건축자재를 과거와는 달리 재난방지용 건축자재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소방법에 따르면 일정한 건물에 입주하는 입주자는 자기의 공간 내에서 화재에 대비하여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다(국회, 2004). 그러나 이러한 법적 규제는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건물 및 대상물에 적용되기 때문에 방재업체에 대한 법적 지원은 여전히 우수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방재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넓은 시각에서 공공기관은 방재상품에 관한 규정을 먼저 국제시장에 제시하여 상품제조에 관한 선도권을 장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업이다. 방재산업에 대한 국제규정이 여전히 미비한 국제무대의 현 실정에 기초하여 우리나라에서 제조한 상품의 규정을 국제무대에서 동일하게 적용하여 상품을 만들어야 할 경우에 우리나라의 산업체들이 가지는 이점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한 예로 1996년에 APLAC(Asia Pacific laboratory Accreditation

Cooperation, 아시아태평양시험소인정협력기구)는 방재시험기관에서 사용하는 시험기술을 평가할 목적으로 관련된 기술기준을 만들기로 합의하였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국제무대에서 방재시험기관이 이용하는 시험기술에 대한 평가기준이 전무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기술표준원, 소방검정공사, 화재보험협회 소속의 방재시험소가 중심이 되어 평가기준을 제정하기로 결의하였다.

1999년 12월에 APLAC는 5차 총회를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하였는데, 여기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방재시험기관인정기준을 ILAC (International Laboratory Accreditation Cooperation, 국제시험소인정협력기구)에 공식기술기준으로서 제안하였다. 이 인정기준에는 방재시험소 시험기관이 갖추어야 할 환경요건, 장비, 인적 자원의 요건, 시험방법의 검증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시험인정과, 1999).

우리나라가 국제시장에서 방재산업의 기술 및 기타 표준화에 관한 선도권을 점유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국제규정을 준수하여 방재품을 만드는 것이 동시에 필요한 전략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건축물에 이용되는 내화구조의 시험방법을 KS(Korean Standard) 규격에 따라서 규정하였으나 1999년 11월 30일부터는 국제규격인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국제표준화기구)에 따라서 규정을 변경하여 방재품을 생산하고 있다.

새로운 ISO규정에 따르면 건축물을 만들 경우에는 과거의 KS 규정보다 더욱 엄한 규정이 적용되었다. 즉, 건축물의 지붕, 기둥, 바닥, 벽, 보 등에 사용되는 건축부재는 일정한 온도의 화재에도 견딜 수 있게 설계 및 시공되었다. 이러한 규정은 1997년도에 행정채신위원회의 과제로 선정되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방재시험소, 건설교통부, 산업표준심의회, 공청회 등을 거쳐 선별된 것이었다(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전자재료류표준과, 1999).

하천물관리기술에도 KS 규정이 변경된 적이 있었다. 우리나라는 세계시장에서 물부족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따라서 물풍요국가로 되

기 위해서는 관련된 물관리기술이 매우 필요한 사정이었다. 이러한 물부족 상황에서 산자부는 하천, 농수로 등의 개수로에 흐르는 물의 양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ISO의 규정에 따라서 2002년 말기부터 KS 규정을 보완하였다(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자동화부품과, 2002). 즉, 산자부는 ISO의 개수로 유량측정분야 기술위원회(TC113) 정식회원으로 가입하면서 국제표준을 따르기로 방침을 변경하였다.

지금까지 나열된 법적 지원에 대한 사례는 여전히 소수이다. 이러한 사례에 기초하여 산자부는 물론이고 소방방재청은 법적 차원에서 방재산업을 더욱 지원해야 한다. 국내규정을 통하여 방재산업체를 지원하는 것도 매우 타당성이 있다. 그러나 <표 1>과 <그림 2>에 따르면 회사사정이 좋은 기업들은 거의가 방재품 수출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국제규정의 선도 및 국내적용에 대한 지원은 보다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3) 재정적 지원

공공부문이 재정적으로 방재업체를 지원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 <표 1>과 <그림 2>에 따르면 방재업체들이 국가로부터 원하는 가장 절실한 지원은 거의 모든 조사대상자들이 동의한 것과 같이 재정적 지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재정적 지원을 누가 무슨 돈으로 지원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관건이 된다. 지원주체는 방재업체로부터 가장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개인이나 단체가 되어야 한다. 즉, 방재업체와 상생의 관계에 있는 개인이나 특히 단체가 재정적 주체가 되어야 한다.

세계화와 지방화의 흐름 속에서 다른 어느 단체보다 지방자치단체는(이하 지자체)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것이 절실하다(신상태, 2002: 13~26). 지역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는 어떠한 산업을 선택하여 육성하느냐는 것이다. 지역산업을 현명하게 선택하였을 경우에

는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많고 반대로 선택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지역경제가 오히려 침체에 접어들게 된다.

좋은 예로 미국의 클리블랜드시와 피츠버그시에는 1950년대에 철강산업이 활발하였는데, 1970년대에 일본의 성장으로 철강산업이 침체에 접어들었고 1980년대에 다시 첨단산업을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켰다(김도희, 2003: 83~84; Kanter, 1995: 33~58). 우리나라 지자체는 지역경제의 자립화를 위하여 잠재력이 다분하고 새로운 분야인 방재산업의 선택과 집중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즉, 지자체가 방재산업을 위한 재정적 지원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지자체가 방재산업의 유치 및 활성화에 성공한다면 지역경제는 물론이고 국가경제의 부흥에 기여를 할 수 있다. 동시에 방재산업도 경영환경이 개선되는 기회를 맞을 것이다.

지자체가 방재업체를 지원하는 경우에 모든 지방정부로 하여금 비슷한 종류의 방재산업을 지원하게 하는 것은 매우 곤란하다. 다수의 지역이 국제영화제를 유치하여 영화산업을 활성화하려는 경우가 실패의 사례이다. 다수의 지역이 동종의 업종에 종사할 경우에 방재업체들이 생존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기 때문이다. 대신에 특정한 지자체를 선정하여 그 지역에 알맞은 방재업체의 집적지를 형성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게 보인다(산업자원부, 2002: 27~45).

물론 산업집중이 우수한지 다양한 산업구조가 우수한지는 조사하는 기관과 견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김헌민, 2002: 207~208), 새롭게 형성되는 방재산업을 위해서는 집적효과가 더욱 바람직하게 보인다. 한 예로, 오래 전부터 일부의 지자체는 자기지역을 방재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방재산업체 유치를 홍보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에 방재기업을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위한 토대로 삼을 필요도 있다.

한편, 지자체가 방재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보조금을 사용할 경우에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 규정을 사전에 숙지해야 한다. 국가가 보조금을 사용하여 자국의 열악한 산업을 보조하

는 것은 그 국가의 고유한 권한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러한 보조금이 다른 국가의 경쟁산업이나 기업들에게 피해를 줄 수가 있다면 WTO에서는 이러한 보조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김종갑, 2002: 2~3; 데니 스콜페키, 2002: 144~145). 이를 위반할 경우에 그 국가는 양자적 혹은 다자적 체제조치의 대상국가로 분류된다.

WTO에 따르면 정부보조금이 모두 위법이 아니라 특정성을 지닌 경우가 위법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서 정부보조금이 어떤 정해진 지역의 산업이나 기업들에게만 분명하게 한정되어 지급되는 경우에는 정부의 자의성 표출임으로 위법으로 간주된다. 그래서 보조금을 사용할 때는 객관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낙후지역 개발, 연구개발, 환경보호의 경우에는 보조금 사용이 합법으로 인정된다(김세원·안세영, 1996: 440~442). 우리나라의 경우 보조금을 낙후지역 개발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특정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WTO의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는 매우 적을 것이다.

방재산업을 위한 보조금은 지자체의 여러 재원들 중에서 선택하여 만들 수도 있겠지만 지자체가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을 이용하면 효과적일 것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67조 2항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최소한도의 재난관리기금을 해마다 적립해야 한다. 그 자금액은 지방세법에 따라서 지난 3년간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에 해당한다. 동 법 제 68조 1항에 따르면 재난관리기금으로 생겨난 수입 전액은 다시 재난관리기금으로 편입해야 한다(국회, 2004).

전술한 규정에 의거하여 지자체가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고 있지만 자금의 운영은 매우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행자부가 2003년 9월 16일에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한 재난관리기금 지출내역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우리나라의 지자체가 지출한 재난관리기금의 전체 금액은 104억 9,500만 원이었고 건수는 76건이었다. 16개 광역자치단체 중에 기금을 가장 많이 사용한 서울시는 58억 8,800만 원이었고, 그 다음이 경기도로서 11억 4,300만 원이었다(《시민일보》,

2004). 요약하면 적절한 자급에 비교하여 각 지방이 지출한 재난관리 기금은 매우 작았다는 것이다.

WTO 규정과 보조금의 현상황에 근거하여 각 지자체가 사용할 수 있는 재난관리기금은 여전히 많이 축적되어 있으며, 그 자금액은 최소한 일년에 수십억 정도는 되는 것으로 행자부가 밝히고 있다(상계서, 2004). 유용가능한 이러한 자금을 방재산업을 위한 보조금으로 사용한다면 재난관리기금의 목적에도 크게 위배되지 않을 것이며, WTO 규정에도 위배될 여지가 거의 없다. 그 결과 이러한 자금활용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으며, 침체된 방재산업의 경영환경을 활성화시키는 데 일조를 할 것이다.

6. 결론

이 논문의 초점은 정부관점에서 방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 가지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었다. 행정적 차원에서 소방방재청과 산자부는 방재산업에 관련된 기능을 확대시키고, 우수한 상품 질과 포장을 갖춘 방재품의 부실한 판로를 개발하며, 대중매체를 통하여 방재품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법적 차원에서는 방재품 제조에 관한 국제규정을 선도하고 동시에 국내적용을 서둘러야 한다. 재정적 차원에서는 WTO 규정에 따라서 낙후지역의 개발이라는 명목하에 지자체가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여 방재산업의 집적지를 조성하는 것이 추천된다.

이 논문을 통하여 방재산업 활성화 정책에 관한 윤곽은 어느 정도 파악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여전히 방재산업에 관한 통계자료를 포함한 구체적 자료가 매우 부족하다. 사실 방재산업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지도 오래지 않았고 정부의 지원부족으로 자료의 부족은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러한 자료는 방재산업 활성화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기본요소들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부는 학계 및 연구계와 협조하여 방재산업에 대한 자료보완을 서둘러야 한다.

■참고문헌

- 김도희. 2003. "지역경제환경변화와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전략: 지역산업육성방안을 중심으로," 《정책학회보》 12(1): 87~101.
- 김세원·안세영. 1996. 《산업정책론: 산업구조조정을 중심으로》, 박영사.
- 김시윤·김정렬·김성훈. 2000. 《정부와 기업: 산업정책의 정치경제》, 대영문화사.
- 김종갑. 2002. "21세기 우리나라의 산업정책과 WTO: 향후 10년간의 산업정책방향과 보조금 문제를 중심으로," 《국제거래법연구》 11: 1~22.
- 김현민. 2002. "광역자치단체의 집적경제와 산업생산성에 관한 연구: 중분류 제조업을 중심으로," 《정책학회보》 11(1): 207~230.
- 노춘희·송철호. 1998. "도시 재난관리시 민간자원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도시행정학보》 11: 1~50.
- 테니 스펀켈키. 2002. "보조금 및 산업정책: 조선산업 분야에서의 보조금의 영향," 《국제거래법 연구》 11: 123~149.
- 산업자원부. 2002. 《2010 산업비전》, 산업자원부.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전자재료류표준과. 1999. "내화구조 시험방법 KS 규격제정고시,"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전자재료류표준과.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시험인정과. 1999. "국내에서 제정된 기술규정을 국제규정으로 채택,"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시험인정과.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자동화부품과. 2002. "하천 물 관리기술에도 국제표준 도입키로,"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자동화부품과.
- 송재복. 2003. "기업연구소의 연구활동활성화를 위한 관련제도분석: 연구활동과 관련된 기업, 정부제도를 중심으로," 《정책과학회보》 7(3): 457~479.
- 신상태. 2002. "산업입지 정책개선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 공업계획입지 실태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국제부동산학과 석사학위논문.
- 안형기. 2002. "위험의 사회·심리학적 속성," 《한국행정연구》 11(4): 68~95.
- 엘른노 싱거·필리스 엠 앤드레니. 2003. 《위험보도론: 매스미디어는 사고, 질병, 재해, 재난을 어떻게 보도하는가?》, 커뮤니케이션북스.
- 정연구·박원훈. 1998. "재난보도 실태와 발전방향 모색," 한국프레스센터.
- 한국언론재단·한국기자협회. 2003. "재난보도의 문제점과 재난보도준칙 제정방안: 제 24회 기자포럼 녹취록," 한국언론재단.
- 홍기남. 2004. "21세기 선진형 국가 재난관리 개선방안," 《행정포커스》 2004(1, 2): 10~14.
- 국회. 200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http://www.nema.go.kr> (검색일: 11월 12일).
- 노디스사. 2004. "제품설명," <http://www.nodis.co.kr/product/descript.htm> (검색일: 7월 12일).
- 산업자원부. 2004. "산업자원부 조직도," <http://www.mocie.go.kr/include/forPrint.htm> (검색일: 7월 1일).
- 소방방재청. 2004. "소방방재청 조직/기능," <http://www.nema.go.kr/Intro/Organization.jsp> (검색일:

7월 1일).

소방방재청·대구광역시. 2005. "2005 대한민국 소방방재·안전엑스포," <http://www.fireexpo.co.kr> (검색일: 5월 28일).

시민일보. 2004. "03. 9. 16., 지자체 재난기금 부실 운영; 3년간 지출 76건 104억에 그쳐," http://www.inews.org/Snews/article_print.php?Domain=seoulilbo&No=28462(검색일: 7월 9일).

진화이엔씨사. 2004. "소방차," http://www.jinhwaenc.com/main/fire_engine/fire_engine.html (검색일: 7월 5일).

케스타사. 2004. "휴대용 소화기," <http://my.ecplaza.co.kr/kesta/21.asp>(검색일: 7월 5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004.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홈페이지," <http://www.koita.or.kr>(검색일: 7월 12일).

한신터보텍사. 2004. "아쿠아 블록," <http://www.taeon-gun.chungnam.kr/Menu/AspMain/subMenu27.asp=2445>(검색일: 7월 5일).

Birkland, Thomas A. & Nath, Radhika. 2000. "Business and Political Dimensions in Disaster Management," *Journal of Public Policy* 20: 275~303.

Flynn, James, Kaspersen, Roger E., Kunreuther, Howard, & Slovic, Paul. 1997. "Redirecting the U.S. High-level Nuclear Waste program," *Environment* 39(3): 6~18.

Kanter, R. M. 1995. *World Class: Thriving Locally in the Global Economy*, New York: Simon and Schuster.

Lam, Newman M. K. 2000. "Government Intervention in the Economy: A Comparative Analysis of Singapore and Hong Kong," *Public Administration and Development* 20: 397~421.

Matten, Dirk. 2003. "Symbolic Politics in Environmental Regulation: Corporate Strategic Responses," *Business Strategy and the Environment* 12: 215~226.

Renn, O. 1990. "Risk Perception and Risk Management: A Review," *Risk Abstract* 7: 1~9.

Wildavsky, Aaron & Dake, Karl. 1990. "Theories of Risk Perception: Who Fears What and Why?" *Daedalus* 119(4): 41~61.

9. A Study on Policy of Activating Disaster-Prevention Industry

Ha, Kyoo-Ma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policy implications to activate depressed disaster-prevention industry. Theoretically, while government plays a major role in activating disaster-prevention industry of early stage, the disaster-prevention industry should play a role in being not policy object but policy utilizer. Realistically, both the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NEMA) and the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 (MOCIE) try to help disaster-prevention industry through administrative, legal, and financial supports, without their specialized organization. Most of disaster-prevention industry are small and medium sized, and their affiliated research centers are not so active. According to the survey, which was done in June 2004, about more than 70% of disaster-prevention industry said that

their management situation was difficult or very difficult for the last six months and thus they need government support very much. Especially, about 60% of disaster-prevention industry responded that they would not need either administrative or legal supports but financial support. Similar result was drawn from the survey over public servants for disaster-prevention and general consumers. The focus of paper has been given on that ① the NEMA and the MOCIE should expand their policy function and emphasize advertisement and education for disaster-prevention industry through marketing and mass media, in terms of administrative support, ② government should lead domestic disaster-prevention industry to international market through applying international production regulation to it and supports export policy for domestic economy, in viewpoint of legal support, and ③ government should make cluster area for disaster-prevention industry by using Disaster-Management Fund in local government without violating WTO regulation, from a standpoint of financial support, for the ultimate purpose of activating disaster-prevention industry.

Key Words : Disaster-Prevention Industry, Public Policy, NEMA, MOCIE